

보도자료 2013. 03. 13.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공보관실
	담당자	홍보심의관 이현복 (☎ 3480-1453)
	공보관실 ☎ 3480-1451	

대법원장 초청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약칭 ‘편협’]토론회 개최

- 편협이 주최한 대법원장 초청 토론회가 2013. 3. 13.(수) 10:00-11:50까지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됨
- 각 언론사의 논설주간, 논설실장, 주필, 보도본부장 등 30명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장 기조연설, 패널 토론, 대법원장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됨
- 언론인협회 또는 언론인단체의 초청 토론회에 사법부 수장으로 서 최초로 참가함
- 토론 참석자들의 각종 사법부 현안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여론의 건전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법원장의 철학이 담긴 진솔한 입장을 표명하는 등 국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함
- 대법원장 기조연설의 요지(기조연설 원문은 별첨)
 - 사법부 존립의 기반은 국민의 신뢰에 있고, 국민의 신뢰 확보야말로 사법부가 이루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임
 - 법원은 국민적 여망에 걸맞은 법관의 모습을 갖추고자 법조일원회의 전면적 시행, 평생법관제의 정착, 연임심사의 강화, 법관 윤리의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사법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음

-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재판의 속성과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고뇌를 거듭하는 법원의 진정한 노력이 이해되는 바탕 위에서, 좀 더 차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기를 바람
-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사법부의 진정어린 노력에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람
- 각종 현안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
 - 단기적으로 법관윤리를 강화하고 지역법관제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역기능을 해소할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평생법관제 정착을 통해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경륜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검증된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이 임명되고(법조일원화), 임명되면 정년까지 사직하지 않고 평생 법관으로 직분을 수행하는 것(평생법관제)이야말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인사정책임
 - 법관은 실제로 공정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공정해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법관이 항상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국민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관의 바람직하지 못한 법정언행 방지를 위하여, 법관윤리 강화, 엄정한 징계, 맞춤형 법정언행 컨설팅 실시 등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법원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공개변론의 중계방송 실시
 -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2013. 3. 21. 예정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공개변론에 관하여 포털사이트 네이버 및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중계방송을 실시함(관련 보도자료 별도 배부함)

■ **마무리 말씀(마무리 말씀 원문은 별첨)**

- 토론회에서 해주신 많은 질의와 지적의 말씀을 국민의 목소리로 알고 마음 깊이 새겨, 사법부가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얻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날 토론은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생중계로 방송됨**

□ **대법원장 초청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토론회 개요**

- 일시 : 2013. 3. 13.(수) 10:00 ~ 11:35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최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약칭 '편협')
- 진행순서
 - 개회(사회 : 심규선 동아일보 논설실장)
 - 인사말 : 편협 송희영 회장(조선일보 논설주간)
 -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말(기조연설)
 - 양승태 대법원장의 토론 참석자들과 일문일답
 - 토론 참석자 : 송희영(조선일보 논설주간), 심규선(동아일보 논설실장), 이목희(서울신문 이사), 임오진(KBS 해설위원), 김종화(MBC 논설위원), 김인기(SBS 논설위원) 등 30인의 신문·방송사 부·국장급 간부들(상세내역은 별첨 '편협 토론회 참석자' 기재와 같음)
 - 양승태 대법원장 마무리 말씀

□ **편협토론회 개최 경위**

- 2013. 2. 6. 편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제19대 회장(송희영 조선일보 논설주간)등 임원진이 새로 구성된 후, 편협측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토론회 초청의사를 밝힘

- 국민들과의 소통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원천이 된다는 대법원장의 평소 철학에 따라, 여론이 제시하는 건전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요 현안에 관한 대법원장의 입장을 밝히며 국민들에게 사법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국민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고자 편협측의 초청을 수락하여 토론회가 개최됨

□ **대법원장 기조연설문**

■ **별첨**

□ **토론의 주요 요지**

1. 연임법관 오찬에서 구속석방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의 취지는 무엇인지, 재벌 등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 계속될 것인지(서울신문 이목희 이사)

- 인신구속에 관한 처리를 함에 있어 진중한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원론적인 일반론을 강조한 것이지 개별 사안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님
- 적정한 양형 기준도 시대에 따라 변천되는데, 과거 경제범죄 양형에 관한 국민적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임
- 재벌에 대한 법정구속 관행이 생겼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고, 개별 사건에 관한 평가는 부적절함. 다만, 경영공백 우려나 기업인이 과거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만을 들어 관대한 처벌을 해서는 안되고, 한편,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며, 법원으로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관념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할 뿐임

2. 양형기준이 낮아서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양형위원회를 대법원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전면 재검토 의향은 있는지(KBS 임오진 해설위원)

- 전세계적으로 양형위원과 양형기준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영국과 미국 밖에 없고, 영국과 미국의 양형위원회보다 우리나라의 양형위원회 구성은 법관 외의 구성원 비율이 훨씬 높음(전체 13인 중 법관은 4인에 불과)
- 양형기준은 법원 독자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용하는 절차를 거쳐 제정한 것이고, 여론이 사회적으로 정착되었을 때 이를 양형기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데, 여론의 사회적 정착 여부가 불명할 때, 양형기준을 일시적 여론에 따라 성급히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양형기준 설정 권한을 법원과 무관한 다른 기관이 가져가는 것은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함
- 양형기준이 최초 시행된 이후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양형기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항상 국민 여론을 경청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양형기준을 개정해 나아가야 할 것임

3. 로펌이 전관예우의 새로운 피난처가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전관예우를 근절할 대책은 무엇인지(경향신문 정동식 부사장)

- 전관예우 문제가 과장되었지만, 전관예우의 존재 여부를 떠나, 전관예우의 논란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
- 전관예우를 근절한다고 해도, 이를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음
- 근본적 해결책은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 정착으로 전관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관의 보수 등 처우개선도 함께 고려해야 함

4. 소수자 보호를 위해 현재보다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할 의향은 있는지(MBC 김종화)

- 현재 대법관 중에서도 여성, 장애가 있는 분, 재산이 적은 분도 있음
- 사회적 약자 · 소수자 보호는 사법부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이고, 대법관들의 성별, 출신 등으로만 소수자 보호를 위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없다고 단정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대법원의 다양성은 대법관의 성별, 출신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대법관 각자의 가치관이나 철학에 달려 있음
- 다만 현실적으로 출신학교 등 겉으로 드러나는 표지들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하나의 인식기준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대법관을 임명함에 있어, 가치관, 성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다양성을 추구해 왔고 앞으로도 다양성 추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

5.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 로스쿨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YTN 최수호 해설위원실장)

-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와 그에 맞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고, 시행 초기의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해서 과거로 회귀하기 보다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함
- 향후 시행경과를 보아 다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에 본질적인 수정을 하거나 다른 제도로 변경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시행 초기인 지금은 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함

6. 법관의 SNS를 통한 정치적 발언 등에 관한 대책이 있는지, 책임용 심사를 강화할 의향은 있는지(매일경제 김세형 논설실장)

- 법관이나 법원 직원도 민주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공공의 관심 사항에 대하여 사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가지거나 친지들과 정치적 토의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임
-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실제로 공정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공정해 보여야 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움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2. 5. 법관들의 SNS를 통한 정치적 견해 표명에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여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권고의견으로 제시하였는데, 법관들에게 위와 같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을 주지시키는 등으로, 법관이 항상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연임제를 통해 부적격 법관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법관들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자칫하면 사법부 독립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7. 지역법관제의 지역유착 등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PBC 이상도 보도국장)

- 지역법관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알고 있고, 사법부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으나, 성실하게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역법관들이 지역법관제의 논란으로 상처받지 않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관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를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으로 법관 인사제도의 원형이고,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법관 전보를 하지 않음
- 지역법관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지역법관 인사교류 활성화, 지역법관 비율 상한 설정)을 하고 있음
- 법관윤리를 강화하고 지역법관제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역기능을 해소할 개선 방안을 연구할 것임

8. 막말 판사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충북일보 함우석 주필)

- 법정에서의 언행 하나하나가 사법부 전체의 신뢰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법관의 막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관 상호간 모니터링의 강화, 법관윤리 강화(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을 통한 명확한 인식, 지속적인 법관윤리 교육), 엄정한 법관징계, 맞춤형 법정언행 컨설팅 실시를 위한 관련 절차 등을 진행 중임.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일부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에 대한 지적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데, 엄정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고,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법신뢰 확보

보를 위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

9. 최근 발생한 막말 판사 사건에 관한 징계를 엄중히 할 것인지, 막말 판사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관 선발에 인성평가를 강조하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은데, 견해는 어떠한지(MBN 정운갑 수석논설위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징계수위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과거 사법연수원 수료성적을 위주로 법관을 선발해 왔는데, 대학 및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즉시 법관임용이 되어 사회활동이나 인성을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였음
- 최근 법관 임용시 인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법조일원화가 정착될수록 사회활동 당시의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해 질 것이라고 생각함

10. 소통 활성화를 위한 추진 내역 및 향후 추진 계획은(내일신문 문진현 탐장)

-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의 존립 근거가 되고, 법원과 국민이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가 깎이 든다고 생각함
- 국민과의 소통은 재판을 통한 소통과 재판 외의 소통 모두 이루어져야 하고, 대법원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 차원에서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2013. 3. 21. 예정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공개변론에 관하여 포털사이트 네이버 및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중계방송을 실시할 예정임

11. 국민참여재판 관련 최종모델의 문제점과 장점은 무엇인지(경인일보 김화양 주필)

-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을 사법절차에 끌어들이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

고, 법원의 규범형성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임

-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재판청구권은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고,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함. 평결이 효력이 사실상의 구속력에 불과하므로 헌법적합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12. 상고심개혁에 대한 견해, 헌법재판소와 통합에 관한 견해는 어떠한지(중앙일보 김진국 논설주간)

-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의 그 본래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우리 대법원의 경우 과도한 상고사건수로 인해 전원합의체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등 상고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
-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이 필요하나, 단순히 대법관 1인당 사건 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법관 증원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대법관 증원으로 인해 단일한 전원합의체 운영이 곤란해지고, 법령 해석의 통일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앞으로 대법원이 본래적 기능을 다하면서도 권리구제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음
- 헌법재판소와의 통합 문제는 대법원이 다른 헌법기관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13. 경기고등법원 설치 관련 대법원장의 의견은 어떠한지(경기일보 김종구 논설실장)

- 경기도의 관내 인구 수, 서울고등법원의 비대화 등에 비추어 설치의 필요성은 공감함
- 다만, 부지 선정, 건축비용, 소요 인원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임
- 또한, 항소심 구조와 관련된 큰 틀에서의 구조 개편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연관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4. 변리사에게 소송대리인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전자신문 주문정 논설위원)

- 변호사측과 변리사측의 양측 주장이 모두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함
- 다만, 양측의 입장 중 어느 것을 중시할 것인지는 정책적인 결정의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대법원장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 대법원장 마무리 말씀

- 별첨

대법원장 초청 편협 토론회 참석자

	성명	소속 및 직함
1	송희영	조선일보 논설주간
2	심규선	동아일보 논설실장
3	이목희	서울신문 이사
4	김진국	중앙일보 논설주간
5	정석구	한겨레 논설실장
6	이준희	한국일보 논설실장
7	이선근	연합뉴스 편집총국장
8	김세형	매일경제 주필 겸 논설실장
9	임오진	KBS 해설위원
10	김종화	MBC 논설위원
11	김인기	SBS 논설위원
12	김화양	경인일보 주필
13	정동식	경향신문 부사장
14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
15	임순만	국민일보 논설실장
16	문진현	내일신문 기획특집팀장
17	정충신	문화일보 논설위원
18	이승현	세계일보 논설위원
19	김상우	JTBC 취재담당 부국장
20	이 준	TV조선 부보도본부장
21	권주만	CBS 해설위원장
22	최수호	YTN 해설위원실장
23	정운갑	MBN 수석논설위원(부국장)
24	김종구	경기일보 논설실장
25	송신용	대전일보 서울지사장
26	함우석	충북일보 주필
27	권홍우	서울경제 논설실장
28	유재명	OBS 편집제작팀장
29	이상도	PBC 보도국장
30	주문정	전자신문 논설위원(부국장)

편집인협회 토론회 기조연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송희영 회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귀중한 자리를 마련하여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법원장에 취임한지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사법부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법원장 취임 이래 줄곧 사법부 존립의 기반은 국민의 신뢰에 있고 국민의 신뢰 확보야말로 사법부가 이루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이라는 기치를 걸고 재판절차 안팎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과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쌓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사법부가 그 헌법적 사명을 다할 수 없다는 절박감과 충정심에서 우리나라 것이 지 결코 시늉만 내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의 진정성이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을 비롯한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친근하고 믿음직하게 느끼는 법원을 만드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가장 중요한 권능은 재판권능입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주된 사람은 법관이므로 재판권능이 진정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영리하기만 하거나 유능한 법률전문가라는 것만으로 존경받는 법관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재판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거나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법관이라면 마땅히 인간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통찰력, 균형감과 공정성을 갖춘 지혜로운 안목, 이해심과 포용력 등을 갖춘 존경받는 인격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사법부는 법조일원화의 전면적인 시행, 평생법관제의 정착, 연임심사와 법관 윤리의식의 강화 등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민적 여망에 걸맞은 법관의 모습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는 필연적으로 승소하고 패소하는 대립 당사자가 있어서 어느 한 쪽으로부터는 불만을 사지 않을 수 없는 숙명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격화되는 대립적 가치관 상호간의 갈등과 경직된 사회 분위기가 가세되어,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나 가치관과 다를 때에는 끝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으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법원의 노력에 큰 위협이 되고, 분쟁의 해결이라는 재판의 본질적 기능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재판의 속성과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고뇌를 거듭하는 법원의 진정한 노력이 이해되는 바탕 위에서, 좀 더 차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여론을 이끌어가는 언론인 여러분께서 사법에 대한 각별한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도 법원이 충분한 신뢰를 받을 만큼 성숙하지 못한 데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헌법이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장하고 있는 재판 독립의 원칙도 그 자체가 신성불가침의 궁극적 목표라기보다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전제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점 또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은 오히려 사법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귀한 약이 된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를 경청하는 자세도 가지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원은 사법의 공정한 태도와 진중한 면모를 잃지 않으면서도, 사법현안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법원에 대한 요구에 깊이 귀 기울여서 이에 부응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미국 독립 당시 헌법 기초자의 한 사람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3권 분립에 대해 말하면서, 행정부는 칼을 쥐고 있는 기관이고 입법부는 입법에 의해 국민의 지갑을 강제로 열게 할 수 있는 기관임에 비해, 사법부는 단지 분쟁에 관하여 의견을 말하는 권한밖에 없어서 국민에게 가장 덜 위험한 기관이라고 설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대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법관의 임기를 종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이 미국 헌법에 수용되었습니다. 저의 의견도 비슷합니다. 사법부는 권력기관이 아니고 권력기관이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단지 해결을 바라는 법적 분쟁에 판단을 말할 뿐입니다. 그 판단에 권위를 부여하는 실질적인 힘은 바로 국민의 이해와 믿음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사법부의 진정어린 노력에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 역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여러 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소중한 조언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인협회 토론회 마무리 말씀

저는 오늘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사법부와 관련한 여러 주제에 관하여 허심탄회하게 토론함으로써 새삼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토론회를 통해 사법부를 좀 더 이해하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해주신 많은 질의와 지적의 말씀을 국민의 목소리로 알고 마음 깊이 새겨서,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와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재판절차 안팎에서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배치되는 실망스러운 일이 법원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대부분의 법원 가족들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 일만으로 사법부 전체의 명예와 신뢰에 회복할 수 없는 금이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멈추지 않고 사법부가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얻는 그날까지 차근차근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